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10월 나온다는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 어떻게 구성되나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해 10월 중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24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회 본관에서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힌 것.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자산 형성을 위해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한을 이미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바 있다"며 "금년 10월 중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를 출시해 중소기업에 근무해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는 월 10~50만원의 근로자 납입금, 기업 지원금(납입액의 20%), 은행 금리우대(1~2%), 정부 세제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도 재학생 18만명, 졸업생 6만명으로 늘린다. 학생들이 일찍부터 자신에게 잘 맞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예산을 올해 828억원에서 내년 1119억원으로 확대 책정했다.

###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뿐?...R&D 세액공제 심사신청 95%가 반도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 주력 첨단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도입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사실상 반도체 단일 지원 역할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심의대상 51조 원 중 95%에 달하는 49조원이 반도체 분야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전지 분야는 4.1%, 수소는 0.03%에 그쳤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역시 전체 신청액의 63%가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분야이며, 해당 분야의 대부분을 지능형 반도체 소재·부품이 차지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신성장·원천기술' 육성을 위해 지능정보, 로봇,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고, '국가전략기술'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술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기술심의회에 심의대상을 살펴보면 어떤 기술분야가 얼마의 세액공제를 요청하는지 알 수 있다.

천 의원은 "반도체 기술은 몹시 중요하지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있듯이 장기적으로 다양한 국가전략기술을 균형 있게 육성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 세금 안 내려고...

#### 국세청 관리 중인 차명재산 5900억원 육박

타인명의로 재산을 숨겨 국세청이 관리 중인 차명재산이 지난해 39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관리 중인 누적 차명재산 건수는 2023년 기준 3911건으로 전년(3827건) 대비 2.2% 늘어났다.

금액으로는 5857억원에 달한다.

차명재산은 계좌·주식·부동산 등을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상당수는 탈세가 주목적이다.

차명재산 유형별로는 ▲예·적금 2624건 ▲주식·출자지분 700건 ▲부동산 587건 순이었으나, 금액으로는 주식·출자지분이 42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영진 의원은 "차명재산은 세금 탈루와 범죄수익 은닉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이 관리하는 차명재산 건수가 늘어난 점은 눈여겨보아야 한다"라며 "차명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끝까지 추적해 실명으로 전환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한 과세를 집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건수는 1만2961건으로 전년(1만3988건) 대비 7.3% 줄었다. 같은 기간 추정세액은 2636억원으로 전년(3485억원) 대비 24.4% 감소했다.